

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136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11. 17.
제 출 자 배 강 민 의원

1. 제안이유

-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하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공개 대상 및 방법(안 제2조~제3조)
- 다.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·운영(안 제4조)
- 라. 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협의
- 다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2. 11. . ~ 2022. 11. .
 - 나) 예고결과 :
 - 2) 부서협의
 - 가) 협의기간 : 2022. 11. . ~ 2022. 11. .
 - 나) 협의결과 :
 - 3) 관련부서 : 기획담당관

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개대상)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절감 사례
2.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·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
3.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
4. 그 밖에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공개방법)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.

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의 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등(이하 “예산낭비 신고 등”이라 한다)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한 자(이하 “신고자”라 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

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, 이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) 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「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6조(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)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「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」 및 「김포시 포상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방재정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재정협력과) 044-205-3733

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 044-205-3716

제54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,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 다)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31.>

[본조신설 2011. 9. 6.]